

인터뷰
그리스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 8-9면

상반기 노동자 투쟁
언론파업 / 현대차/
화물연대 / 전교조...

▶ 6, 7, 11, 13, 14면

아랍 혁명
이집트 대선과 좌파 /
시리아 혁명의 발전

▶ 10면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 11면

동성결혼
다른 가족은
가능하다

▶ 12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4

Left21.com

제83호 |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 관련기사 8.9면



파업하고 있는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진: cccodexarad2 (블로그)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위기가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전화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구명난

재정을 메우려 긴축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문에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정착된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경제 구조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유로존 '중심' 국가인 독일은 유로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출로 벌어들인 여유 자금을 다시 '주변' 국가들에게 싸게 빌려줬다. 이 돈은 주로 건설·부동산·관광업 등에 투자돼 거품이 계속 커졌다.

이런 구조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남유럽의 '주변' 국

가들은 수출을 늘려 빚을 갚기 힘들고,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남유럽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중심' 국가들의 은행들도 함께 수렁에 빠져 들었다.

정치 위기

이 상황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파헤쳐졌지만 경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 유로존 위기를 촉발한 것이 그리

스 총선 결과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그리스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였다.

그런데 그리스 총선 결과로 더는 이전 방식으로 불만을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2008년 겨울부터 시작된 급진적인 학생들의 투쟁과 2년간 17차례나 진행된 총파업을 통해 급진화된 노동자들은 더는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그리스가 통제가능하다는 '시

장의 확산'이 사라졌고 불안이 상황을 압도하게 됐다.

IMF와 OECD 같은 경제기구들은 서둘러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유럽계 자본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실물 부분에서도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조선·선박업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더 심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 9면으로 이어짐

구역질나는 신매카시즘 중단하라

▶ 관련기사 2~4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자본주의는 끝나고 부채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의 위기감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이재오, 벌써 치매인가?

“쌍용자동차 여러분, 건강과 복직을 바랍니다.”
2009년에 쌍용 노동자들이 자살특공대로 불렸던 김문수의 말버릇기

“대통령이 된다면 핵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
정몽준, 버스 요금이나 알고 다녀라.

“사상검증은 MRI로 할 건가 엑스레이로 할 건가”
이해찬

“우리의 예쁜 어린 세대들이 다른 세상, 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우리는 이 탁류 속에서 더 고생하며 버텨야 한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을 그리는 우익 논객 류근일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은 종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했던 분들이다. 따라서 종북 아류”
새누리당 하태경

“통합진보당의 ‘새로나기특위’의 혁신파들 ... 대한민국의 주류가 포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정통 진보 세력”
(조선일보) 김대중

“김정일·김정은은 개XX냐라고 물었을 때 ‘개XXX다’라고 하면 그건 종북세력이 아닙니다”
전원책의 전무후무한 망언

“1백 년 전에 레닌이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선거 부정 등]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했다.”
전원책

“쿠바는 30명을 가지고 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해방연대의 국가변란가능성을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검찰이 한 말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다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 받은 김지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김지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 '제주 해적 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에 고소해 법적 대응 준비 중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나를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이 나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6월 4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내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며 “요즘 진보당 사태도 있고”라며 이번 수사가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한 마녀사냥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고소한 것은 지난 3월 9일이었다. 내가 트위터에 올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국방부 대변인도 내게 ‘반성’을 요구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그야말로 우파의 전방위적 공격이 쏟아졌다.

이런 공격의 의도는 명확했다. 당시 연예인들도 나서서 구럼비 바위 폭파 반대 주장을 할 정도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부와 해군 당국, 보수 언론은 나를 마녀사냥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불타기를 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런 강경 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김지운

정국을 돌파할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 구럼비 폭파 직후 강정에 머무르며 나는 “해적기지”라는 말이 더욱 와닿았다. 어째서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이라며 분노를 토해 냈는지 심분 이해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해적을 해적이라고 하지 뭐라 하나”, “내가 먼저 해적이란 표현을 썼다. 나도 고소하라고 해라”라며 내게 힘을 북돋아줬다. 이런 응원은 십자포화 같은 공격 속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 됐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제주 해적기지’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의 제국주의 야

욕은 아름다운 강정을 전정터로 만들어 버렸다. 해군 당국은 연일 구럼비를 폭파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철저히 반대 운동 진영을 짓밟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해군 당국은 나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

평화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오바마 — 조지 부시보다 한 술 더 뜨는 살인마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오바마가 이라크에서의 ‘나쁜 전쟁’을 반대했고,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판타나모 기지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 백악관 내부 폭로자가 시기적절하게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는 예멘·소말리아·파키스탄에서 무인폭격기로 살해할

사람들의 ‘살인 명부’를 냉정하게 재가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빈 라덴을 처치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오바마는 “살해할 것인가 체포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무인폭격기를 이용한 무차별 살인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가 선출된 뒤 무인폭격기로 죽은 사람이 급증했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알카에다 지도자를 살해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 무인폭격기가 파키스탄 지역을 폭격해 27명이 죽었다.

무인폭격기로 죽은 민간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군은 사망자 중 군인이 될 수 있는 연령대의 남성들을 모두 전투원이라고 주장한다. 무인폭격기를 이용하면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조종사들은 네바다 벙커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인폭격기에 대한 두려움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줘 미국 군대가

철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오바마는 전쟁에 결코 반대한 적이 없다. 그는 단지 조지 부시의 특정한 전쟁 ‘전략’을 반대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오바마를 지지한 지배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민중에게 이렇게 바뀐 방식은 전과 다를 게 없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위크》 2306호 사설 / 번역 최용찬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종북’ 마녀사냥이 판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이어지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관례까지 유행하던 ‘국가보안법 사문하’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종식’이니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친북 좌파’를 주된 처벌대상으로 삼아왔다. 북한 체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고무·친양한다’는 명분으로 탄압해 온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주요 탄압 대상은 혁명적 좌파들이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몰락 이후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비판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노련이나 해방연대처럼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단체들도 탄압을 받았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좌파와 무관한 개인을 처벌하는 ‘막걸리 보안법’의 성격도 일부 있었고 심지어 부르주아 야당까지 탄압 대상이 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주된 탄압 대상이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로 맞춰진 것이다. 최근 해방연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

소 사유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검찰은 해방연대가 ‘북한과 무관하지만,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지배자들이 어떤 빌미를 내세우든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도전하려는 조직들을 파괴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주되게 북한 우호적인 좌파나 혁명적 좌파를 겨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소수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마녀사냥해 진보운동 전체를 분열·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언론·출판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기본권마저 제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가들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알리면서도, 폭넓은 반대 운동을 건설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사노련, 해방연대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급진좌파 단체들이 탄압에 맞서면서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 건설의 올바른을 주장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방어운동 과정에서 개혁주의나 NGO 단체 등을 개방적이고 광범하게 끌어들이는 데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쉽다.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에 동의하진 않지만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는 반대하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포함해 폭넓은 방어를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 공안당국의 탄압도 더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자주파 단체들도 6·15선언 이행과 민족 자주 등 자신들의 고유한 강령을 지지해야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이래서는 마녀사냥에 맞서 효과적으로 방어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마녀사냥이 노리는 진정한 목적, 즉 진보의 위축과 고립화, 분열에 제대로 맞서려면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은 단결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탄압받는 단체 자신이 이 점을 분명히 하며 방어를 호소해야 한다. 최미진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6월 13(월)수)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대기아차그룹 규탄 2012 투쟁 승리결의대회
6월 13(월)수) 오후 5시 대한문 정리해고 철폐·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주최: 금속노조
6월 16(일)토) 여의도공원 오후 1시 쌍용차 해고와 연대의 날 1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대한문 분향소 오후 7시 2부 연대 집회와 문화제 주최: 쌍용차 법대위 등
6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역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집회 주최: 철도노조
6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대 노천극장 10·20 총회 투쟁 승리! 4대 요구 쟁취 총력결의대회 주최: 전국공무원노조
6월 28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경고파업 투쟁대회 주최: 민주노총

우파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저지해야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의 발톱을 세우고 사정없이 이 사회를 핏쥐고 있다. 이명박 자신이 "종북세력",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자들" 운운하며 마녀사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도 '국가관을 의심받는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며 직접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독려했다. 새누리당 웹사이트는 온통 '종북' 때려잡기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검찰이 선거 부정과 상관도 없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더니, 이번에는 기무사가 당원 명부를 이용해 군 복무자 중 통합진보당 당원을 처벌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났다. 당원 명부를 가져간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 법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엄 촘스키, 장하준 등 베스트셀러 필자들의 책을 군인들에게 읽지 못하게 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를 탄압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이유로 김지운 씨도 소환했다.

민주당에게 "종북 주사파의 줄게 노릇"을 그만두라며 압박하던 우파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전대협 방북대표 출신인 임수경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이해찬의 '북한인권법' 반대 발언을 공세의 발미로 이용하고



5월 26일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집권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사회 분위기를 우경화시키려 한다.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황우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매카시즘

우파들이 모두 달려들어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온갖 더러운 부패 스캔들과 정권 최악의 위기를 덮고, 이번 기회에 계급 세력관계를 우파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일상이 지배자들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바로잡는 데는 애초부터 추호의 관심도 없었다. 마녀사냥 속에서 어느새 선거 부정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의 머릿속 사상을 꼬집어내 검증하는 악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종북' 마녀사냥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마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함 역풍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미 '도가 지

나치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마녀사냥에 정면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우파에게 마녀사냥의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지금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색깔론은 안 된다' 하면서도 '이석기·김재연이 자진사퇴 안 하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이자 의회에서 다수당일 때

(2004년)조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을 만큼 민주주의 문제에서조차 불철저한 집단이다. 따라서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진보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진보진영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바로잡는 것과 우파의 마녀사냥에 맞서는 것을 잘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선거 부정은 진보의 관점에서도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비례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파와 국가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방어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종북' 마녀사냥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 탄압 앞에 흔들리고 분열한다면 계급 세력관계 전체가 불리해질 것이다. 진보운동의 결정이 아니라 우파의 마녀사냥에 의해 진보 의원들이 제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석기·김재연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어하기 어렵다'거나 '지금 방어에 나섰다가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NGO와 좌파들이 적극적인 방어 운동 건설을 꺼리는 것은 아쉽다. 선거 부정과 마녀사냥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들의 마녀사냥 공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마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더러운 마녀사냥 앞에 진보가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

최미진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물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랑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FTA 발효 바람잡이로 나섰고, 제주 해군기지 강행도 나서서 찬성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궤퇴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총선을 돌파한 박근혜는 그 뒤 새누리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잠시 가려져 있던 '수구꼴통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데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로 당선한 의원도 개인 사상을 발미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향수'를 넘어서 아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때 창당대회를 5월 17일로 잡았는데, 올해 새누리당 전당대회 날짜도 5월 15일이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5월 16일을 어떻게든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다.

한편, 민생법안 1호로 내용은 '사내하도급법'도 박근혜의 계급적 본색을 드러낸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

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철두철미하게 1파센트만을 위한 법인 것이다.

이런 법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골수 우파

이 강창희를 비롯해 김용갑, 김기춘, 최병렬, 김용환 등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늙고 추한 자들의 모임인 '7인회'가 바로 박근혜 후견 그룹인 것도 최근 드러났다. 반동적이고 낡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골수 우파적인 자들을 고른 것처럼 보일 정도다.

박근혜의 정치 기반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부패했으며 영남 지역주의에 물든 세력인데, 박근혜의 우파적 본색은 이런

태생적 기반과 관계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권이 레임덕 위기로 휘청대고 있으니 집권당은 우파 결집을 위한 우경화 드라이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KTX 민영화 강행을 선언했고, 대법관 후임 인사를 모조리 자신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로 채웠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강경 우파 발언을 내뿜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는 박근혜가 이처럼 우파 본색을 드러낼수록 과거 회귀에 대한 불안감과 대중의 반우파 정서도 커질 것이다. 이미 젊은층에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검증해야 한

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 중도층이나 수도권 청년들 속에서 지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파가 톱톱 뭉쳐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02년에 이회창도 압도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나 결국 반우파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면서 반우파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의 우파 본색과 이명박의 부패를 모두 공격해야 한다. 반우파 투쟁이 커질수록 '이명박근혜'는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김문성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엮히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경선이 대선 후보 대리전처럼 진행되면서, 손학규 등 '비노' 진영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견제하려고 김한길을 지지했다. '비전'도 '감동'도 없이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등 퇴행적 현상도 계속됐다.

사실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자들

은 모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좌편향'한 것이 문제라는 '중도강화론'을 받아들였다. 겉보기뿐이던 '진보 시능'조차 문제 삼은 것이다.

경선에 참여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경선에서 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지 않았다. 국가관을 핑계로 한 새누리당의 이석기·김재연 사상 검증과 제명 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색깔론 마녀사냥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이해찬과 김한길이 '매카시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실 지금으로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선두 그룹인 이해찬·김한길은 물론이고 3위 그룹인 추미애·강기정

모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중도 강화론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돼도 포퓰리즘적 성격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도 친자본주의 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이 와중에도 박지원은 저격수 주특기를 되살려 박근혜 폭로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을 낮추지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폭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자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다.

김문성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성한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김정일·김정은을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진보정당에게 ‘3대 세습,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전향한 옛 주사와 활동가들도 동원돼서 자신의 과거와 옛 동지들을 밀고하게 만들고 있다. 주사와 출신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은 아예 “주사와 출신 국회의원 한두 사람 날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과거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화장실에서 웃고 있다’는 이명박도 “북한보다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숨가락을 엿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우파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다. <조선일보>는 “임수경 의원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혜찬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자, 이제 우파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태도를 ‘종북’이나 아니냐의 잣대로 삼기 시작했다. 극우의 조갑제도 “[임수경이 실언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북한인권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종북주의’ 논란은 결국 남한 자본주의 국가와 지배 체제(현정 질서)에 충성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비난에서도 나타났다.

박근혜가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한 데 이어서, 이명박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풍 때 사상 고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김씨 세습 왕조’에 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한 체제가 더 우월하며, 남한 체제에 복종하라는 우파들의 주장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진보 활동가들 자유민주적 기본권도 부정하는 우파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풍 때 사상 고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우파는 걸핏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지만, 남한 지배자들이 대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줘 온 것은 모른 체한다.

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걸핏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지만, 남한 지배자들이 대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줘 온 것은 모른 체한다. 삼성 이진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그룹을 물려주려고 온갖 탈법을 자행해도 눈감아 주면서 말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고달픈 삶밖에 없다는 점도 남한과 북한이 별반 다를 게 없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우파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인권의 수호자인 양 위선을 댄다. 그러나 남한은 국가보안법 탄압과 노동자 탄압으로 국제 인권 기구들로부터 늘 비판을 받는 국가고,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의 90퍼센트가 남한 감옥에 있다.

우파들이 열 올리는 북한인권법도 주로 ‘반공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며 냉전 대결을 부추기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가 아니라 그 과정의 ‘감시와 규제’를 강조하는 법이기도 하다.

우파는 진보세력이 탈북민을 무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은 바로 이 정권과 우파였다.

이명박 정권은 탈북민 해의 수용소 건설을 추진했고, 탈북민 합동심문 기간을 90일에서 1백80일로 늘렸다. 그리고 국정원 주도의 합동심문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욕설이나 폭행, 사실상의 감금 등 반인권적 대우”를 받게 했다.

탈북민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는데 2010년 하태경은 “작은 정부”의 원리는 탈북자 정책의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탈북민을 위한 지원 강화를 반대하기도 했다.

어불성설

따라서 남한 자본주의와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는 우파의 강요는 어불성설이다.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려고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아 온 남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사실 남한 체제와 국가는 1948년에 제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통일되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의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세워진 국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정부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다. 남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 등 이런 지배 체제에 맞선 민중의 저항으로 그나마 전진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남한 자본주의와 국가가 자행한 착취·억압 때문에 일부 좌파들이 그 반발로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기원과 성격은 사실 남한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1948년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한 북한 관료들은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무자비한 희생이 강요됐다. 이로 인한 불만을 제압하고자 억압기구는 비대해졌고,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는 보장될 수 없었다.

북한 관료들은 서방·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속에서 매우 중앙집권적인 명령 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를 운영하려 했다. 이것이 북한 관료들이 ‘수령’의 유일지도를 강조하고 권력 세습까지 나아간 배경이다. 북한 관료는 제국주의 압박에도 인민의 필요를 희생시키는 군비 증강으로 대응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북한 체제도 남한과 똑같이 계급 분단이 존재하고, 축적을 위해 다수 인민을 희생시키는 체제다.

따라서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에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이 대안 사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부 자주파 동지들의 북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북한 민중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것은 남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좌파는 북한 노동계급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북한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런 혁명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판은 우파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김영익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돌아버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다.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진영은 오히려 이에 맞서 단결 투쟁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지배계급의 마녀사냥에 단호히 맞서면서 스스로 민주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 문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이번 선거 부정·부실 사태에는 통합진보당 내의 자주파 경향 활동가들이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스탈린주의 경향의 활동가들이 의회 진출과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법

적 대중 정당 안에서 정의를 못 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옛 소련 체제나 소련이 군대를 동원해 동유럽과 북한 등에 이식한 체제를 ‘사회주의’로 여기고, 이런 체제를 대안으로 지지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스탈린은 1920년대 중반에 1917년 혁명의 유산을 철저히 파괴하는 ‘반혁명’을 통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세웠다. 소련 군대가 동유럽과 북한 등에 이 체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스탈린주의는 이런 나라들에서 관료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반면 남한의 스탈린주의 활동가들은 제국주의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스탈린주의를 채택했다.

남한의 스탈린주의 활동가들은 국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평등하고 정의로

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투쟁해 온 투사들이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도 1930년대에 “소련의 강패들은 실제 강패지만, 서방의 기층 스탈린주의자들은 스스로 혁명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스탈린주의는 설사 기층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로 채택됐을 때마저도 심각한 문제와 결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위로부터

스탈린주의는 “당이 계급을 대표”한다고 본다. 당의 결정이 곧 계급의 결정이고, 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곧 계급이 권력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급을 대표하는 당이 국가를 장악해 옛 소련이나 북한식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사회주의 완성의 길이라고 믿는다. 이때 사회주의는 당이 노동계급에게 ‘위로부터’ 선사하는 것이 된다.

위로부터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를 선사하는 것은 소련 군대나 관료일 수도, 소수 게릴라일 수도, 사회주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과 민주주의는 무시되는 것이다. 당이 국가 권력에 좀더 가까워진다는 목표 하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종속된다.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기성정당에서나 만연해 있는 여론조사 ‘조작’까지 범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선거 부정과 폭력 행위까지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권력 획득을 위해 부르주아 세력과 실용주의적으로 무원칙하게 손잡는 것까지 정당화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참여당과 통합을 밀어부치고, 민주통합당과 같은 노골적인 부르주아 세력과 ‘물자마’ 야권연대와 향후 ‘연립정부’까지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결과와 혁명의 과정(과 수단) — 자본주

의 착취에 도전하는 의식적·집단적 저항 — 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다.

이때 혁명을 이끄는 당은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이고, 구분되는 일부다. 마르크스가 1871년에 파리의 노동자들한테 배운 것처럼, 당은 과거의 모든 경험에 기초해 노동계급을 지도하고 계급에게서 배워야 한다.

마르크스는 1864년 제1인터내셔널 규약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선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대중적 행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은 지배계급의 탄압을 받는 동지들을 분명히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진보진영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스탈린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박성현

맑시즘 2012 MARXISM

7월 26일 (목) ~ 29일 (일)

참가 신청 및 문의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 휴대 전화: 010-4909-2026(문자 가능) | marxism@marxism.or.kr
[@marxismTwit](https://twitter.com/marxismTwit) | [facebook http://www.facebook.com/marxism.or.kr](http://www.facebook.com/marxism.or.kr)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맑시즘’ 추천사

“올해도 맑시즘 2012가 다가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맑스의 예지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준비하신 분들과 먼 길 마다 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남한 노동자를 대신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노동운동 · 사회운동의 리더 · 활동가 · 명연사들이 온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문정현
신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유진
녹색당 활동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교수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7년의 시대》 저자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 연락 간사

하종강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이 밖에도 더 많은 진보 운동 활동가,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연사로 옵니다.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 Σωτήρης Κοντογιάννης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와 격월간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경제 전문 정기 기고자다.
G8 반대, 나토 반대 시위 등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의 주요 조직자였다. 유럽사회포럼 등 국제 반자본주의 포럼들에서 수많은 연설을 하기도 했다.



- ▶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 · 정치 위기와 저항
- ▶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 오늘날 개혁과 혁명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과 공동 발표)

경제 위기, 제국주의 그리고 반란

-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어디로?
- 중국 자본주의와 위기
-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인도주의 개입의 신화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 — 동아시아는 어디로?
- 이집트 혁명: 평가와 전망
- 오늘날 중국의 계급투쟁
-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전망과 과제

- 쌍용차 투쟁: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투쟁 주체?

한국 진보 정치 운동

- 박근혜 대세론? 안철수 대안론?
— 대선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 북한과 진보 운동
- 왜 탈북민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가?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라

- 사회양극화 시대 여성과 노동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 동성애 억압과 혐오의 역사 그리고 해방의 정치

※ 이 밖에도 맑시즘2012에서는 수십 개의 흥미로운 워크숍이 개설됩니다.
더 다양한 주제를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최영준

언론 파업의 한 축이었던 KBS 새노조가 복귀했지만 MBC 노조는 “김재철 퇴진 없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며 파업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파업 참가 조합원 35명이 무더기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MBC 노동자들은 위촉되기는커녕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징계 대상자 명단에 빠졌다”고 나설 정도다.

위기감이 커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또 다시 MBC 노조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사측은 더는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파업 참가자는 더욱 늘어나 파업 이래 최대 규모인 7백87명에 이르렀

다. MBC 고위 핵심 보직을 역임한 국장, 부국장급 간부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구MBC의 경우, 거의 모든 국장들이 파업을 지지하고 파업 조합원을 징계하고 싶어도 징계를 처리할 실무자가 없다고 한다.

김재철 비리 캐기

그런데, 최근 <미디어오늘>은 [김재철 비리 캐기] 조통하는 효과 이상을 거두지 못했다, “김 사장의 비리 의혹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의 투쟁을 꺾어내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계 원로들도 여전히 ‘낙하산 사장 해임’은 쉽지 않다며 투쟁의 김을 빼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폭로한 온갖 비리는 ‘김재철 퇴진’의 중요한 명분이자, MBC 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다. 최

근 MBC 노조가 시작한 김재철 구속 촉구를 위한 거리 서명에 매일 수천 명에서 1만 명이 동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비리 캐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용기자 채용 등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사측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고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선 공정보도를 위해 복귀해서 싸우자’는 식의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MB ‘아바타’ 김재철 퇴진 없이 공정보도는 불가능하다. 2010년 MBC 노조가 지방선거 ‘공정보도’를 이유로 파업을 접자, 김재철은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해고, 파업 조합원 대량 징계, 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지금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은 김재철을

퇴진시키지 못하고 “굴복하면 평생 후회한다”며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노조 지도부는 MBC 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단식보다는 실질적인 연대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6월 ‘경고 파업’을 앞두고 MBC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연대 파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MB 언론장악 심판, MB 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시민사회단체 동조 단식에 강조점을 두기보다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파국은 탄압에 맞서 파업을 유지·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한다면 김재철을 퇴진시키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인력 ‘시용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MBC 노동자들 이명박과 김재철의 발악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계 최소화화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KBS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 발 물러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신생 노조이고 KBS 구노조에 비해 소수파 노조다. 그럼에도 90여 일 굳건하고 끈질긴 파업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게다가 KBS 노동자들의 굳건한 파업은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였음을 밝혀냈고, MBC 파업과 함께 6월 민주노총 투쟁의 앞길을 닦는 구실도 했다.

또한, 파업 기간 조합원 수가 9백 명에서 1천2백 명으로 크게 늘었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리셋 KBS 뉴스 9>를 통해 쌍용차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광우병 문제 등을 보도하며 더 넓은 진보적 시야를 갖게 됐다.

물론 애초 요구사항이었던 낙하산 사장 김인규 퇴진이 빠진 것과 본부장 거취 문제가 모호한 채 타결된 것에 KBS 노동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점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계 원로들과 <미디어오늘>, KBS 전 사장 정연주 등이 ‘대선 공정보도를 위해 업무복귀’를 종용했던 것은 문제였다. 이런 압력에도 KBS 새노조 투쟁대책위(정대위)가 잠정합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가 결국 이번에 파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홍기호 KBS 새노조 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퍼센트 정도 승리”라며 후속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인규와 데스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복귀 이후 ‘보도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속 투쟁이 중요하다. 또, 공동파업의 한 축이었던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큼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노조는 5월 12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말~7월 초에 물류를 멈출 것”이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비싼 기름값과 낮은 운임 때문에 “올려 겨자 먹기로 운행”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운임 대폭 인상과 함께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제도인 표준운임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에 밀려 2009년부터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름값, 타이어, 엔진오일, 보험료, 그 밖의 차량 유지비도 다 올랐습니다. 도대체 생활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사채 쓰고 …, 도대체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부산의 권형환 조합원은 노동자들의 심정을 토로했다.

“비조합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차량에 붙여 준 빨간 리본도 계속 달고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비조합원들이 같이 파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는 클 것입니다.”

평택의 김대열 조합원은 “현장에서 싸워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했다.

“분회 조합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싸워 보자”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인다. 문제는 얼마나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다.

물량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번엔 확실한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등은 노동자들의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현재로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부담감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데, 일감이 없는 것도 걱정입니다.”

만약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정쩡하게 싸워서 안 된다. 파업의 위력을 높여 오래 끌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비조합원들까지 동참시켜 파업 대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럴 때 “비조합원들이 일감을 채가면 어찌나”는 불안감도 불식시킬 수 있다.

대체 수송을 막아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만 봉쇄와 도로 점거일 텐데 이런 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넓은 연대와 지지를 건설하는 속에서 자신감을 끌어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철도노조가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면, KTX 민영화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정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동안 누적된 불만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다.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다른 투쟁에도 힘을 주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조영지

6·28 민주노총의 1차 ‘경고 파업’에 동참하자

민주노총은 ‘10대 우선 개혁입법’을 요구하며 6월 28일 1차 ‘경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규제, 노조법 개정 등은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의 당면 요구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데 6월 28일 ‘경고 파업’은 사실상 한두 노조의 시한부 또는 부분 파업에, 다른 노조들이 ‘총회’ 등을 열어 가세하는 집중 집회로 조직되고 있다. 아직 많은 산별·연맹의 노조 지도자들이 기층에서 실질적인 파업을 건설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일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 말기의 위기를 노려 4년 만에 민주노총의 파업이 조직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이 투쟁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 중단과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도급법안을 내놓으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따라서 민주노총도 총력을 다해 싸워야만 한다. 우선, “현안 투쟁에서 성과를 내서 6월 말~8월 말 파업을 승리하겠다”던 김영훈 지도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론 파업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파업 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최근 정리해고 법안 논의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봐도 투쟁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투사들의 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투사들의 구실이다.

활동가들은 지도부의 파업 결정을 활용해 현장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투쟁 대열을 늘려야 한다. 여기저기서 투쟁이 분출하는 지금은 좋은 기회다.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같은 요구와 작업장지의 현안을 결합해 크고 작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쌍용차,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같은 ‘현안’ 투쟁 연대에도 앞장서야 한다. 투쟁 지지 모금, 연대 성명 발표, 공장과 사무실 앞 촛불집회 홍보전 등을 조직하고, 쌍용차나 MBC 파업 노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조직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대 집회에 참가하면서 투쟁을 확대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협소한 부문주의적 관점에 갇혀 있거나, 지도부만 비판하며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좌파의 자세가 아니다.

정충남

전초전에서 승리한 현대차 투쟁 — 전진을 위한 과제

김기선·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현대차지부가 2주 연속 주말 특근 거부 투쟁에 승리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노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쳤던 사측이 투쟁에 밀려 주요 요구를 양보했다. 현대차 대표이사인 울산 공장장이 “전 임직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개 사과문을 전 공장에 부착했다. 사측 책임자 2명 처벌과 비정규직지회 노조 활동 보장도 확대됐다.

이는 사측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과 이데올로기 공세, 폭력에 맞서는 통렬한 반박이었다. 그리고 “무분규 3년” 현대차에서 올해 초 신승훈 열사 투쟁 승리에 이어 투쟁 근육이 붙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사측이 “백기를 들었다”, “라인을 멈추면 회사는 무릎 꿇는다는 노조 작전에 굴복한 것”이라며 투덜거렸다. (자세한 소식은 본지 온라인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런 상황을 더 큰 투쟁으로 연결해야 한다.

우선, 급속노조가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선포한 7월 13일 파업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 핵심에 현대·기아차가 있다. 7월 13일 파업이 성공적이면, 이후 투쟁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부문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파업이 실제 조직될까 의심도 한다. 예컨대, 파업이 아니라 이른바 ‘확대간부 파업’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7월 13일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하고, 현장의 활동가들도 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현대·기아차, 현대차 원·하청 공동 투쟁이 잘 조직돼야 한다.

하나의 적에 맞서 현대차 노동자들과 기아차 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연대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현대차 사측이 이윤 증대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분열을 조장해 왔는데, 단결 투쟁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 4공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해 벌이는 외주화 반대 투쟁 같은 사례가 늘어야 한다. 또 공동 출근 투쟁 등을 통해 단결과 연대의 기운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현대차 원·하청 공동 투쟁에서 1사1노조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규직지부뿐 아니라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도 1사1노조 추진으로 방향을 세운 상황에서, 단결 투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사1노조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투쟁 승리를 위해 이데올로기 투쟁이 중요하다.

현대차지부는 사측의 폭력 사태에 대응해 잘 싸웠고, 우리는 진심으로 지지했다. 다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휴대폰으로 폭력 동영상 보내고, 몇 차례나 리플릿을 내며 혼란을 조장했다. 현대차지부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약간 미흡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사측과 정부, 우파 언론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에 맞서 단호한 반박과 홍보 활동, 필요하면 집회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이 투쟁이 개별 작업장을 넘어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불법파



4천여 명이 집결한 현대차지부 임단협 출정식 “3년 무분규” 현대차에서 투쟁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견 정규직화를 위한 원·하청 공동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입법 추진이 그렇고, 급속노조의 “주간연속2교대제” 법제화 요구도 그렇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급속노조의 연대와 공동 투쟁도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국회를 둘러싼 정치 투쟁 성격의 강화는 민주당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함께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민주당과 공조하거나 부르주아적 압력 때문에 노동계급의 요구를 희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급힘없이 나아가자

5월 8일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의 공식 선언 이후, 울산 현대차에서 최근 1사1노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역 우파신문 <울산매일>은 “[1사1노조가] 성공하면 화력(火力)이 약한 비정규직 투쟁에 기름을 부어 주는 셈이고, 반대로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격이다”(6월 5일치) 하고 말했다. 사측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쟁 이후 1사1노조 추진’ 입장이던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도 일단 1사1노조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6월 4일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는 1사1노조를 추진하자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규직지부의 1사1노조 추진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만 하다. 그동안 우파 이경훈에서 민주당 이상욱·박유기·윤해모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열의가 없거나 심지어 이경훈처럼 투쟁을 통제했다.

이런 우려에도 비정규직지회가 1사1노조 추진을 결정한 것은 중요하다. 원·하청 공동 투쟁 분위기와 1사1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열망이 입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는 등 문용문 지도부의 열의 있는 태도도 긍정적 작용을 한 듯하다.

1사1노조 추진은 ‘하나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노동자 투쟁의 핵심 원리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지부의 책임감을 높이고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가 통합된다면 탄압 때문에 나서지 못하던 비정규직 비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할 기회가 생긴다.

물론,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우려하는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비정규직 통제 문제는 남는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통합 노조의 조합원 대상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여야 하고, 이 노조에서 비정규직 부문 위원회의 교섭권, 쟁의권, (총회) 체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다.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통제가 우려돼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옳다. 더 큰 단결을 위해 조합원 대상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돼야 한다. 원·하청 공동 투쟁의 요구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다. 그리고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고 함께 투쟁해야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고 통제하려할 때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쟁의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가진 타당한 불신을 감안해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방안을 협력적으로 수용하고, 정규직지부 대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1사1노조가 부결되고 무산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비정규직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따라서 그럴 때라면 유연하게 일단, 1사1노조 통합을 결정하고, 대상과 노동 3권 문제는 이후에 공동 투쟁과 협력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제 조건을 앞세우다 사실상 정규직·비정규직이 1사1노조로 단결할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때문에 부결되는 것보다, 일단 통합을 결정하고 이견을 좁히며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것이 비조합원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게다가 부결된다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앙금 때문에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새누리당이 5월 30일 19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도 발의자 28명에 포함돼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진지하게 고려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보호” 문구는 연막이다.

이들은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어기면 사업주가 과태료 정도를 물면 그만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꿈쩍 않는 현대차 자본가들을 보라. 과태료 따위가 이들에게 큰 짐이 아닐 것이다.

진정 “보호”를 하려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들의 정규직화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에도 큰 힘과 자신감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화한다.

현행법은 현대차처럼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원사업주(원청)가 사내하청의 근로자수, 업무내용, 장소, 기간, 노동시간 등에 직접 개입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법안을 적용하면 원청과 하청 사업주 간의 계약에 이런 쟁점들이

포함되면 불법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한다.

게다가 원청 사업주가 직접 하청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법안에서 놀라운 내용은 원청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사내하도급으로 돌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취약하거나 복수노조 하에서 친사업주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을 때, “정보 제공”과 “협의”로 정규직을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이 단지 사내하청 노동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유연화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고통전가

입법 제안 설명에서도 이들은 고용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정규직의 유연화”를 꼽고 있다. 아직은 주요 작업장에 정규직 노조가 잘 조직돼 있어 본격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이만영은 <매일노동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입법 취지를 “새누리당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야당하고 다른 게 고용의 유연성이다. … 어떤 방식이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항의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경총도 새누리당의 법안에 반대하지만, 이들이 불법파견 합법화를 반대할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아예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자체를 비판했다. 정말이지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집단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는 유로존 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경제 후퇴 조짐 등 세계경제가 악화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유연화를 통해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그리고 올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원·하청 연대 투쟁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미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 요구안은 과도하다. 터무니없다. 현실성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려 한다. (급속노조 현대차지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단지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급속노조가 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그리스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

A.S. Koutas/Reuters/Photomedia (블로터)

스페인

은행 위기가 썩어빠진 체제에 맞선 저항에 불을 붙이다



A.S. Koutas/Reuters/Photomedia (블로터)

스페인 전역에서 광경을 접가했던 '5월 15일 운동'

스페인에서 앤디 두간이 그리스로부터 확산된 경제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을 전한다. 앤디 두간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스페인 자매조직 '엔루차'의 회원이다.

스페인이 그리스식 봉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드러나면서 스페인 지배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구제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모든 조건들이 이미 존재한다.

스페인 국제 이자율이 최고수준에 달했고 신용등급이 곤두박질했다. 잔혹한 긴축정책도 전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최근 스페인은 20억 7백만 유로의 국제 발행에 성공했지만 같은 날 국제 신용평가업체 피처는 스페인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3단계나 낮췄다.]

값싼 신용에 기반했던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지금 꺼지면서 경제 위기를 특

히 격화시켰다. 그 결과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 25퍼센트에 이르렀고 매일 주력 1백70채가 압류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은행들은 1억 4천4백만 파운드로 손실을 대출금 손실을 떠안았다.

보수파인 국민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권했다. 그 후 국민당 정부는 일자리 파괴와 노동권 박탈을 벌였고, 유럽에서 공공부문이 가장 취약한 나라에서 지출 삭감을 위한 전쟁을 해 왔다.

청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청년의 절반이 실업자고, 일하는 청년 대다수도 단기간 계약에 저임금을 받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거의 1백90억 파운드를 스페인에서 빚뒀 큰 은행 방기아에 쏟

아부었다. 그런데 80억 파운드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사라졌다.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경제 붕괴만이 아니다. 그리스처럼 대중 저항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15일 '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 운동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5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비록 지역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줄었지만, 올해 5월 12일에 도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자본주의를 비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5월 15일 운동'과 긴축 반대 투쟁에서 청년과 노동자 들이 서로 겹치는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공공요 방어를 위한 운동이 가장 분명한 예다. 카탈루냐, 마드리드 그리고 발렌시아의 5월 15일 투쟁에서 주로 청년 교사들이 대중집회와

갈림길에 선 그리스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연대》의 기자 **조르고스 피타스**(Giorgos Pittas)가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을 말한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일부 축약했다.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 왔던 그리스 사회당 PASOK과 신민주당이 5월 초에 있었던 선거에서 추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인은 고통의 크기입니다. 실업률은 이제 21퍼센트가 넘고, 청년실업률은 50퍼센트에 달합니다.

임금과 연금은 20~40퍼센트나 삭감됐고 사기업 부문 노동자 40만 명이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빛은 더 늘어났습니다!

둘째 원인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맞

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17번의 총파업

투쟁을 했습니다. 평균 6주에 한 번 끝이

있던 것입니다! 이들 중 두 번은 48시간

파업이었습니다. 모든 총파업 투쟁에서

수십, 수백이나 되는 파업과 점거가 아래

로부터 일어나 노조 지도부들에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좌경화시켰습

니다.

왜 긴축 반대 정서가 좌파 진영 중 다른 세

력, 예컨대 '민주좌파'인 Democratic Left나 그

리스공산당(KKE)이 아니라 시리자 주위로 결

집했나요?

시리자의 지지가 커진 것은 매우 최근

입니다.

사회당에서 왼쪽으로 갈라져 나와 좌

경화한 사람들이 첫째로 주목한 것은 '민

주좌파'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좌파'는 사

회당과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기를 원한

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당과 민주좌파가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좌파를 떠나 더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선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좌파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다."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좌파가 단결해야 한다는 시리자의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회당에서 이탈해 좌경화하던 시기 에 이는 어리석은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공산당은 지난해 내내 긍정적인 전진을 했습니다. 예컨대 공산당은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근래 할리보르지아(hallyvourgia) 제철소의 노동자들이 2백 일에 걸친 영웅적 파업을 벌였는데 이 노동조합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곳입니다. 이 파업은 거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로 공산당은 시리자만큼이나 전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인 총파주의가 걸림돌이 됐죠.

시리자는 손에 잡힐 듯한 해법 - 좌파 정부 - 을 제시했고 그들은 다른 좌파세력들에게 이를 위해 단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를 지지했습니다.

시리자는 누구입니까?

시리자는 1968년 공산당 내의 분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분열은 소련과 뜻을 같이한 쪽과 떠는 그렇지 않기로 한 유로комму니스트들 사이의 분열이 었죠.

1980년대 고르바초프 집권기 동안 그들은 "좌파와 진보"의 연합인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로 다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당이나 심지어 신민주당과도 연정을 함께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습

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 청년조직 전체가 시나스피스모스와 공산당을 탈퇴했고,

후에 신좌파경향(NAR)을 형성했습니다. 신좌파 경향은 현재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체인 안타르시아(antarsia)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나스피스모스가 구 소련공산당 분파와 시나스피스모스에 잔류한 유로코뮤니즘 연합파로 다시 분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시나스피스모스는 대안세력화 운동에 함께하면서 좌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스피스모스는 몇몇 다른 소규모 조직들과 함께 더 넓은 연합을 형성하고는 이를 시리자, 즉 급진좌파의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나스피스모스는 단연코 시리자 내 최대 세력이며 시리자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습

니다. 시리자 안에는 기존 연립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했던 온건한 개혁주의자들도 있습

니다. 동시에 긴축을 멈추기 위해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습

니다. 시리자 안에는 좌우가 모두 있는 거죠.

시리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대안은 분명하진 않아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요지는 위기가 체제 자체의 위기 아니라 은행들과 '카지노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과 지도자들을 갈아치우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럽연합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결책은 이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의 올랑드를 동맹자로 여깁니다.

시리자의 지도자들은 그리스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3년 혹은 5년 동안 빚을 안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채를 재협상하겠다는 거죠.

반면 우리(안타르시아)는 빚을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채액 이상을 상환해 왔습

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행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를 더 앞으로 밀어부치라고 주장합니다.

좌파 정부가 만드는 위로부터 변화는 한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다고 해 봅시다. 그래요, 해고가 중단돼야

한다는 종이짜가리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가 이것을 시행하겠습니까?

이제 강경 파시스트 단체인 황금새벽당이 의회에 진입합니다. 누가 그들을 저지하겠습니까? 경찰? 경찰 질단이 황금새벽당에 투표했습니다.

진실은 좌파의 선거 승리는 운동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계급 운동을 변화의 동력으로 보며, 노동자 통제를 주장합니다.

안타르시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안타르시아는 투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리자/시나스피스모스는 20년 동안 존재해 왔고, 공산당은 90년 가까이 있어 왔습

니다. 안타르시아는 생긴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르시아에 속한 조직들은 군부독재에 맞선 1973년 반란에서 태어난 혁명적 좌파들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

니다. 5월 선거에서 혁명적 좌파는 7만 5천 표를 얻어 역대 최대 득표를 했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얻은 표의 세 배입니다. 그러나 안타르시아의 진정한 힘은 득표수가 아니라, 이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운동에 있습

니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 사회당 정부가 새로운 대학 법을 개악하려 했을 때, 1주일 안에 거의 2백 개의 대학에서 점거 운동이 일어났습

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안타르시아 소속 학생들이 한 일입니다. 또한, 안타르시아는 작업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내내 우리는 여러 작업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는 한두 명의 안타르시아 활동가가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정부 기관에서 노동자를 자르겠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이에 분노해 집회를 열 때 안타르시아 회원들은 점거투쟁을 해서 자리를 지켜내라고 호소했습니다.

안타르시아는 시리자 지지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난 선거 결과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시리자가 점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축 지지 정당들에 맞서 강력한 투쟁

을 해야만 한다는 말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좌파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자본주의 좌파가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면 안타르시아를 찍으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는 파시스트에 맞서 주도적으로 투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금새벽당이 최초로 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좌파들에게 파시스트에 맞선 전선을 형성하고, 선거 전에 아테네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행진하자고 호소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거 전에 총파업과 파업 행동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많은 작업장이 파업 중입니다. 언론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신문 발행과 TV 방송이 완전히 중단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투쟁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나 좌파 정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업하고, 점거하고, 나치를 당장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리자에 투표하는 사람들과 동지적 방식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공산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이루겠다는 사회당의 약속에 다수 대중이 환멸을 느끼게 된 것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8년이나 걸렸습

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에서 상황은 빠르게 돌아옵니다. 거리에서 투쟁하거나 파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가 사회주의입니다. 개혁주의자와 혁명가 사이의 차이점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르시아가 여기서 매력적인 축이 되는 것이 사실적입니다.

우리는 민중을 위한 다콜트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통제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행동이 열쇠입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6월호 / 번역 김준호

▶ 1면에서 이어짐

유로존 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고장 났고 지배자들이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크루그만 등은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으로 돌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루비니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독자적인 환율 정책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방안들은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더욱더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존 지배자들의 정책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유럽 전역에 국유와 급진좌파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다콜트, 유로존 탈퇴, 은행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정치양극화를 낳은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급진적인 청년과 노동자 들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을 통해서만 급진적 대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로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노동자 투쟁은 금방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빠르게 번져갔듯이 말이다.

유로존의 상황은 한류의 노동자와 투사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자신감, 교훈을 주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선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리스에 집중돼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도 그것이 진실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 혁명적 맑스주의자 할 것 없이 다들 시시각각 바뀌는 그리스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스 대중이 자국 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긴축 프로그램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5월 6일 선거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스 대중의 거부 의사는 주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를 통해 표출됐다. 시리자의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프로그램을 "아반작"이라며 비난했고 유럽연합·IMF 양해각서에 찬성하는 정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을 거부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6월 17일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리자는 주요 우파 정당인 신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번 승부에는 엄청난 판돈이 걸려 있다. 만약 시리자가 양해각서에 반대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가 전면적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급진좌파 진영에는 시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스탈린주의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축에 드는 그리스 공산당(KKE)은 조직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은 또한 대단히 총파적이다. 공산당 총서기인 알레카 파파리가는 지난 선거 이후 시리자와의 회동을 거부하는 등 총파적 행보로 지지를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안타르시아

그 밖에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도 있다. 안타르시아는 마오주의 또는 트로츠키주의 배경을 지닌 극좌파 조직들의 연합체인데, 그 안에서는 공산당에서 분열해 나온 신좌파경향(NAR)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자매조직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WEK)의 비중이 가장 크다.

안타르시아는 그리스의 디폴트와 은행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유로존 탈퇴를 요구하는 차별화된 강령을 내세운다. 이는 그리스 공산주의 운동 진영 내에서 유럽연합에 친화적인 편인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자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안타르시아는 지난 총선에서 1.2퍼센트를 득표했다. 이전보다는 올랐지만 의회에 진출하기에는 부족한 득표율이다. 안타르시아는 6월 17일 선거에도 나온다. 그러나 안타르시아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리스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불출마론자(그 가운데는 안타르시아의 유로존 탈퇴 요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들은 일단 시리자가 집권하면 더 좌경화해서 유럽연합에 맞서 싸울 것이라 한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을 걸어야 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치프라스는 지난 5월 24일에 방영된 뉴스 인터뷰에서 시리자가 집권하면 독일과 그 동맹 세력들도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메시지는 이와 사뭇 다르다. 그는 최근 <7다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제 그리스가 "대가를 치를 때"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이 논의들은 대부분 선거적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2008년 12월 이래 그리스는 유럽에서 한 세대만에 가장 치열한 사회적 투쟁이 불타오른 곳이다. 긴축 정책은 총파업을 17회 불러왔고 그 밖에 수많은 전국적·지역적 수준의 파업과 점거를 촉발했다.

그리스를 좌경화시킨 것은 바로 이런 투쟁들이다. 시리자는 선거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긴축 반대 운동을 이끌지는 않았다.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사회당(PASOK)의 통제 하에 있었는데, 이제 사회당의 통제력은 와해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산당과 안타르시아 활동가들이 훨씬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나는 안타르시아가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타르시아가 선거에 나온다면 진정한 투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이 '진정한 투쟁'에는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맞선 대대적 공세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안타르시아는 또한 시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협력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왔음을 분명히 밝혔다.

안타르시아의 목소리가 들수록 시리자도 그리스에 영원한 긴축을 강요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굳건히 싸워야 한다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다.

결정적인 전투는 선거가 끝나고 벌어질 텐데, 여기서 안타르시아는 실로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최용찬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305호 / 번역 천정목

새 단계로 들어선 이집트 혁명

이집트에서 필 마플릿
영국 사회주의자, 중동 전문가

지금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이집트 혁명의 가능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대한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는 혁명에 참가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그의 다른 가족들은 부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짓을 생각하면 황당한 판결이었다. 또, 활동가 수백 명을 죽인 경찰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집트 민중은 분노했다. 카이로와 다른 도시에서 이집트 혁명은 새 국면에 들어섰다. 최고군사위원회 장군들이 자신들이 이집트의 변화 열망을 성공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이집트 민중은 다시 거리를 점령했다.

“진짜 대통령이 여기 있다”

최근 치러진 이집트 대선 1차 투표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에 따라 군부 후보인 아메드 샤피크와 무슬림형제단 후보인 무하메드 무르시가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됐다. 2차 투표는 6월 16일과 17일에 치러질 것이다. 군부는 샤피크가 ‘민주적’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 그것은 무바라크 정권의 복귀를 뜻할 것이다. 샤피크가 많은 표를 얻은 것이 부정 투표 덕분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6월 2일에는 좌파 대선 후보인 함딘 사바히가 시위 참가자들로 꽂힌 타흐리르 광장에 나타났다. 사바히는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덕분에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다. 광장의 사람

들은 열광하며 소리쳤다. “여기 진짜 대통령이 있다!” 2011년 1월 혁명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대중 운동이 지도자를 선출한 것이다. 사람들은 사바히가 이집트 민중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는 주로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표를 얻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타흐리르와 다른 이집트 도시의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이 무슬림형제단과 그 후보인 무르시를 불신한다. 형제단과 무르시가 군부 정권과 여러 차례 타협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는 2차 투표에서 샤피크에 맞서 무르시에게 투표하려 한다. 샤피크가 자신이 당선하면 혁명 운동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좌파는 무르시가 사바히뿐 아니라 1차 투표에서 4위를 기록한 자유주의적 이슬람주의 후보인 압델 모나임 압돌 푸투와 함께 ‘대통령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또한 무르시와 다른 후보들이 무바라크 일가와 고위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활동가들은 혁명 순교자들의 집에서 행진을 시작하면서 ‘분노의 주간’을 선언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옛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반복해 외쳤다.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 속에는 사람들의 분노와 희망이 뒤섞여 있다. 사람들은 역겨움을 토하면서도 민중의 힘을 자각하고 있다. 이집트 민중은 혁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군부가 자기 후보를 당선시켜 옛날로 돌아가려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집트 민중은 그 결의를 보여 줄 때가 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6호 / 번역 김용욱



6월 2일 호스니 무바라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타흐리르 광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대선 국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편집한 것이다.

최고군사위원회와 반혁명 세력의 후보 아흐마드 사피크가 간신히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무르시와 맞붙게 됐다. 샤피크의 결선 투표 진출은 국가의 억압기구, 언론, 기업주 등 그의 편에 선 반혁명 세력의 무지막지한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또 반혁명 세력의 후보 배출 저지를 목표로 개혁주의 세력과 혁명적 세력이 힘을 합쳐 단일한 정치 전선을 구축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 운동은 함딘 사바히 후보를 지지한 빈민, 노동자, 농민, 콥트교도, 실업자, 혁명적 청년 수백만 명이 이번 대선에서 얻은 성과를 환영한다.

단결

사바히 후보는 차순위 득표 자리를 둘러싸고 샤피크와 점전을 벌였고, 결국 21.2퍼센트를 득표해 간발의 차이로 3순위 득표자가 됐다. 이 결과는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리는 대중 투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한다. 샤피크의 승리는 혁명 운동에, 또 운동이 쟁취한 민주적·사회적 성과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반혁명 세력들이 야만적인 보복을 광범하게 펼칠 돌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해 이집트의 모든 운동 세력들이 **자파의 이익보다 혁명의 대의, 즉 샤피크의 패배를 위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혁명 운동이 반혁명 세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와정의당이 내세운 사회·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정의당의 사회·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에 경도돼 있다. 또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특히 최고군사위원회는 신뢰하면서 혁명가는 탄압하는 그들의 행태에 비판을 삼가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혁명의 현재와 미래다. 우리는 오늘 구체제 후보에 맞서 대중과 함께하는, 가능한 가장 광범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다. 샤피크가 집권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쟁, 또 정치·사회 혁명의 지속을 위한 투쟁의 조건이 극도로 악화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5호 / 번역 조영훈

홀라 대학살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시리아 혁명

서방은 지금 시리아에 “군사적 수단”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사회주의자 사이먼 아사프가 혁명 운동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반란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홀라 대학살로 시리아에 외부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시 늘고 있다. 영국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는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헤이그의 경고는 친정권 민병대가 홀라 마을에서 대학살을 벌인 뒤 대다수 서방국가가 시리아 대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헤이그의 성명은 외국의 개입이 시리아와 시리아 혁명 양쪽에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음을 되새기게 한다. 그러나 새로운 “강경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한 서방의 시도는 시리아 정권과 동맹을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부에서 군사 개입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혁명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리아

국내에서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외의 외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었다. 지난 4일 저항세력 측은 유엔의 평화안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예멘식 해법” — 예멘의 살레 대통령 축출처럼 정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만 체면을 살려주면서 국외로 축출하는 방식 — 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에도 혁명 지도부 대다수가 반대했다. 혁명 내부에서 외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자 서방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국가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국가위원회의 망명 지도부는 리비아와 같은 방식의 서방 개입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실패했고, 시리아 현지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국가위원회는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위원회 의장 부르한 갈리وني 사임해야만 했다. 시리아국가위원회뿐만 아니라 터키에 있는 자유시리아군의 “공식” 사령부도 혁명 세력이 무장 투쟁과 시민 항쟁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하자 주변화됐다. 혁명 세력한테도 홀라 대학살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지금까지 혁명에 수동

적 태도를 보이던 각계각층의 주민들 사이에 정권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갈수록 커진 덕택에 지역조정위원회들을 대표해 혁명 지도부가 선언한 항의 파업은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파업은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공업과 상업 중심지인 알레포도 이러한 파업 물결에 동참했다. 홀라 대학살 홀라 학살 이후 가장 중요한 발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레포였다. 6월 1일 수많은 알레포 시민들이 가두로 쏟아져 나와 시내 중심가로 행진하려 했다. 이 시위는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 가운데 가장 컸다. 이러한 시위 규모와 파업 운동의 성장은 대다수 평범한 민중 사이에서 혁명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모두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두 운동과 지역 총파업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다. 친정권 측 사바히 민병대가 파업을 깨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러한 운동과 함께 무장 투쟁도 더욱 더 커지고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새로운 군사 조직인 시리아혁명전선이 지난 4일 결성됐다. 시리아혁명전선은 무장 대원 1만 2천 명을 통솔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시리아군과 별개로 활동하고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가 벌인 군사적 도박은 정권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권이 처한 위기 수준을 가늠하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군대의 이반이 현재 심각한 수준이고, 그 때문에 정권은 탄압에 좀더 조심스런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파적 내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지만 시리아의 현재 상황을 레바논 내전이나 이라크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웃 나라들과 달리 시리아의 수니파 주민은 인구의 75퍼센트에 달한다. 이번 혁명이 종파적 반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다. 시리아 혁명은 기독교도, 드루즈파, 쿠르드인 같은 소수민족을 공격하지 않았

다. 사바히 민병대의 주요 자금줄 또한 정권과 긴밀히 연결된 부유한 수니파 가문들이다. 그럼에도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흔히 알려진 알라위파한테도 보복 공격이 벌어진다면 혁명은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홀라 대학살은 인근 마을 출신의 알라위파 강패들이 저질렀다고들 한다. 그러나 홀라 학살을 계기로 알라위파 주민들도 친혁명 쪽과 친정권 쪽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알라위파 출신 병사들이 혁명 진영으로 탈주하고 있고, 시리아 서부의 알라위파 지역들에서도 반란 지지가 늘고 있다. 현대 시리아 국가는 식민지 시기에 서방 열강이 조장한 종파주의에 반대하며 탄생했다. 이렇듯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하고 군세 세력으로 남아 있고, 혁명이 애초부터 내세운 구호도 바로 단결이었다. 종파주의가 혁명에 위험 요소로 남아 있지만, 혁명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진 못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6호 / 번역 정중수

일제고사 ‘종결’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6월 26일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온갖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기타와 배드민턴 등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게다가 교과부는 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생과 학교, 교사 모두를 ‘경쟁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일제고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학교별 성과급 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면서 교육청부터 학교, 교사까지 줄 세우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제고사 결과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등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게 특별교부금으로 1백30억 원을 받은 반면 일제고사 결과가 9등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16억 원을 받았다. 이러니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일제고사를 잘 봐야 한다는 뉘달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천교육청은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으면서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학교 등급이 매겨지고 성과급이 차별 지급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제고사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준 것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사실뿐이다. ‘201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를 보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2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4년 내리 최하위다.

미친 경쟁 교육

교사들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꾸준히 펼쳤고 이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이 생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마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 일로 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왔다.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

이다. 이들 교사의 바람은 한결같이 ‘일제고사 종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교조 지도부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6월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일제고사 당일인 26일 1인 시위를 전국 2천13개 학교에서 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조퇴를 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교과부 후문에서 열 예정이다.

전교조 본부가 진정으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려면 이 계획을 전 조직적으로 강조하며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제고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교과부의 징계 엄포를 분명히 반대하며 맞서야 한다. 그래야 더욱 많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강원과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 6곳은 올해도 이를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미친 경쟁 교육’을 끝장내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 함께 하자.



최대현

일제고사 폐지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미친 경쟁 교육’을 끝낼 투쟁을 건설하자.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험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연초에도 학교 해당 주소지가 아닌 학부모들의 내년 입학 문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전교생 62명의 아담한 능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9년째 일하는 김은혜 행정실무사의 이야기다.

능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수가 5학급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제 자발적인 입학 행렬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데는 무엇보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유로운 자연 환경과,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 간 접촉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규모 학교를 줄이려는 교과부와는 사뭇 다르게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작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다.

교과부는 5월 17일 개정안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으로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무려 전국 3천여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됐다.

정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적 셈법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전교조는 집회 등 반대 행동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8개의 교육청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50퍼센트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한 강원·전남 등의 지역 교육청과 교원 단체들이 법 개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교과부의 강제적 학교통폐합 시도는 여러 가지 경제적 셈법을 고려한 ‘곰수’

다.

첫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지면 그동안 지급됐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이 경감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예산이 2014년부터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당국마저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겠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비정규직을 손쉽게 구조조정 하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행정 업무를 도울 학교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필자가 취재한 능북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았는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고사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전교조가 제시한 “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의제를

한 발 앞서 무너뜨리려는 시도다.

교육 강국인 핀란드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04년 기준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정부는 돈 몇 푼 아끼려고 교육을 뒤편에 두려는 것이다.

작은 학교들이 강제 통폐합되면 농·산·어촌과 부도심 지역의 교육이 파탄 날 것이다. 또한, 학교를 터전으로 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생계 위협을 가하고, 학교를 구심점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전교조가 밝혔듯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교과부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서지에 전교조 교사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사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가 일정하게 자라 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거듭된 의지 천명은 결코 KTX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혜도 민영화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 갈등 속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현 정권이 빨리 끝내 주길 바랄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나라 행정부의 수장은 여전히 이명박이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깊어지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다. 이 속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의지를 천명해 해외 자본의 철수를 막고, 전 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조짐이 그렇듯이, 만약 경제가 급락하면 대선 전이라도 신속히 KTX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철도공사로부터 전국 4백25개 역사(驛舍)와 철로 관제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것을 “국유화 조치”라고 칭했지만, 이는 기만적인 억지일 뿐이다. 국토부가 역사·관제권을 회수하려는 이유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고용석은 “철도의 모든 사업에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제, 유지·보수, 역사 시설, 화물·여객 등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역사·관제권 회수의 논거로 “서비스의 질”, “공공성”을 들먹이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오히려 민영화와 관제·시설·운영의 분리는 통합적 운영을 마비시켜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역사에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점에선 역사·관제권 회수에 반대하는 철도공사 측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들은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하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한 민영화, 인력 감축 등 신자유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과 정반대 편에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투쟁도 중요하다. 노조 지도부의 일부는 “KTX 민영화와는 달리 임단협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주저하지만, 사실 두 투쟁의 요구는 서로 떨어질 문제가 아니다.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요구는 철도 공공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결집하는 것은 민영화 반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조직 건설

물론, KTX 민영화는 철도노조로만 완원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요금 인상, 대형 참사, 인력 감축 등의 재앙을 낳는 전체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문제다.

따라서 철도노조뿐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이 함께 광범한 정치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6월 5일 서울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주요 역사 세 곳에서 대규모 홍보전을 벌인 것은 좋은 사례다. 이날 홍보전에는 노동자·학생·활동가 1백30여 명이 참가해 결속을 다지고 거리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

이런 일은 계속돼야 한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소속 단체들을 동참시킬 행동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전·경기 등 곳곳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대책위들이 활동해 왔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의 지역과 대학 등 곳곳에서 홍보전, 기자회견,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구심, 즉 조직이 건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운동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고, 정부의 공격에 언제나 신속히 맞설 태세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경제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몰아칠 신자유주의에 정면 도전할 중요한 투쟁 전선이 될 수 있다. 좌파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쟁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킬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 불독 정신을 갖고 끈질기고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박설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박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5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동성결혼이 미국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바마가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자, 미국 남동부 지역 기독교계에서는 “수용소를 지어 레즈비언과 호모들을 가두고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를 설치하자”며 동성애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나는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선언을 환영한다. 이성애자거나 동성애자거나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오바마가 진보적이어서 그럴까? 멀게는 1970년대 후반 동성애자 교사를 해고하는 브릭스 법안을 막아내는 것부터,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공정교육법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즉, ‘동등한 권리’는 지금껏 투쟁해 온 성소수자들의 성과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발언에 대해 51퍼센트가 동의했고 반대는 45퍼센트에 그쳤다. 오바마의 발언은 지금 미국 사회 여론이 동성애를 존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동성결혼 요구는 국가가 ‘이성에 가족’에게만 주는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의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발뺌을 할 모양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혼인보호법(DOMA)’ 폐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DOMA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같은 연금, 세제상의 법적 이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동성 커플은 여전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1천1백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게 된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제대로 양육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이성애자 부부 자녀들



6월 2일 서울 청계로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동성결혼 합법화! 다양한 가족 구성권 인정하라!”

보다 더 불행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진정한 이유는 학교나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혐오와 편견의 벽 때문이다.

‘비정상’ 낙인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출산률이 떨어져 사회가 망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6월 2일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한 필자

출산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이다.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네덜란드의 출산률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을 보라.

동성결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201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며, 프랑스 등 22개국이 동성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시민결합을 보장한다.

자본주의 가족제도는 이성에 가족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가치 위에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이 가족제도에 고착돼 있는 고정된 남녀 성역할, 순결주의, 각종 성차별적인 관념들을 당연하다고 여겨 왔다.

동성결혼은 이러한 관념에 일정 부분 도전하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것을 기를 쓰고 반대한다.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정상’ 낙인은 ‘이성에 정상가족’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고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동성결혼 금지가 해악적인 이유는 그것이 강화할 차별과 혐오가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해친다는 점이다. 흑인과 성소수자가 대립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데도 미국에서 많은 흑인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곤 한다.

나는 가족제도가 지긋지긋하고 싫다. 내 동성 파트너의 투병 기간 동안 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자였던 나는 단 한 번도 수술동의서나 치료 결정에 서명할 수 없었다. 나의 파트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 절차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된 다음에야, 다른 나라의 동성 커플들에겐 ‘배우자’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만이 아니다. 나는 성소수자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를 원한다. 성소수자의 이 모든 권리들은 현재의 ‘가족제도에 도전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또한 나는 지금껏 견고한 가족제도 때문에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이 사회가 야비하게 박탈한 권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 이 글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http://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다.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써 온 피임법이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입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가격을 올려 여성의 피임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식약청은 약의 부작용을 발미로 이런 후퇴를 정당화한다. 물론 사전피임약은 일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더 안전한 피임법(콘돔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피임약을 선택해 왔던 것이다.

결국 이 계획의 진정한 배경은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의·약사 간 이권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겐 평범한 여성들의 삶과 결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또, 낙태를 막아야 한다며 피임 실천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도, 이제 사전피임약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한편, 우파와 의사들은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약청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더 무책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임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성관계 전에 미쳐 피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권리가 보장돼야만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3일 안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의사 처방을 받도록 절차를 번거롭게 하면 시기를 놓쳐 이 피임법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의사 허락 없이 여성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미진

《좌파하라》, 박노자·지승호, 꾸리에, 1만 4천 원, 2백56쪽

혁명과 진짜 좌파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때문에 상처받고 고달팠던 마음이 혁명에 대한 기대로 승화되는 것 같은...

인터뷰 형식이라 더욱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만 아니라 혁명과 강력한 급진 좌파정당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이 책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는 혁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고대나 중세에 살고 있었겠다. 19세기 초반 노예해방론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시장자본주의가 파산한 지금은 자본주의 소유의 원칙에 반하는 “무상물수” 같은 주장을 펼 시기라고 강조한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현실성을 꿈꿀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극복을 포기한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에서 얼마나 허약하고 반노동자적으로 변해 갔는지도 폭로한다.

그래서 그의 실천적 결론은, “노동운동과 결합된 강력한 급진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내가 상당히 재밌게 봤던 부분은 2008년 촛불시위를 평가하는 구절들이었다.

“촛불시위에서 지식인들이 자율적 운동을 칭찬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류”였다는 것이다. “운동을 계속 이끌고 갈 강력하고 급진적인 좌파정당이 있어야 하며 게릴라성 운동은 초기로서는 좋지만 돌파력도 지속성도 크게 모자라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 강력한 급진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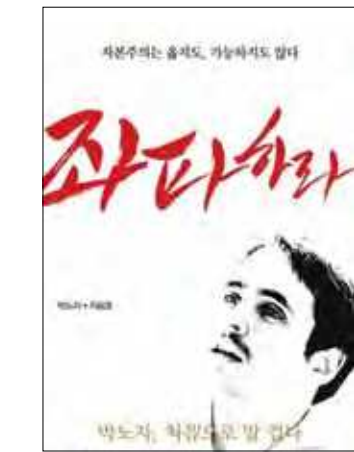
파의 부상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노르웨이 ‘진보당’(나치당의 이름) 같은 극우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온건좌파인 노동당의 배신적 태도와 그보다는 좀더 왼쪽의 좌파정당이 갖고 있는 은근한 지식인적 태도와 오만 같은 요인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장하준식 스웨덴 모델의 오류에 대해서도 쓴소리한다.

혁명의 현실성

한편, 그가 레닌주의의 유효성을 언급할 때, 나는 레닌주의를 한물간 혁명가들의 퀴퀴한 추억으로 치부하는 지식인들과 박노자가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래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혁명기의 소비에트는 무엇보다



서로 조언을 주고 받는 논의기구이고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는데 1917년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서는 볼셰비키당의 구호는 레닌이 얼마나 소비에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서평



이 책은 최근 진보신당의 또 다른 지식인인 김상봉 상상연구소 전 이사장이 낸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와도 극적으로 대비된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노동자 경영권을 말하면서 경제활동에서 이윤 추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박노자 교수의 말마따나 “노동자가 경영한다고 해도 회사는 ... 시장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 노동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대북 적대주의에 대한 비판,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 젊은 진보를 배려하는 좌파의 면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등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급진 좌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어진

주간연속2교대 논쟁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올해 현대·기아차 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이다. 공동 투쟁을 결의한 현대·기아차 지부장은 서로 입단투 출정식에 참가해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투쟁은 “2급 발암 물질”인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기도 하다.

두 노조는 ‘3무 원칙’(임금 하락·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이 반영된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도 전임 이경훈 집행부가 후퇴시켜 놓은 ‘죽어가던 3무’를 살려냈다.

그러나 사측은 ‘3무를 내세우면 주간연속2교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라도 더 생산하려는 현대·기아차 사측에게 3무를 전제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펄쩍 뛴 만한 요구일 것이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노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주는 일부 활동가와 교수도 노동자 양보론을 제기한다.

예컨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임금 보장을 내세워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상호 정책국장도 그런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임금을 양보하면 또다시 잔업·특근 등 초과 노동을 통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해 임금을 벌충해야 할 수도 있다.(정규직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후퇴시킬 것이다.

더구나 임금 양보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이 임금 양보를 강요당할 것이고 자동차 부품업체나 다른 부문도 압박할 것이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 임금 양보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양보론자들의 주장은 지금 노동자들에게 잘 먹혀들지는 않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 실시 이후 기아차 노동자들의 58.2퍼센트는 “심야노동이 사라져도 임금 수준은 현행과 동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31.7퍼센트는 “10퍼센트 정도의 임금 양보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노조가 제대로 투쟁을 벌이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이어 온 상황에서 하루빨리 심야노동이라도 없애고 싶어 서일 것이다. 기계이 임금 양보를 받아들일 노동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한편,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산하 노사자문위원회 박태주 대표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대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려야 한

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조 지도부도 사측의 ‘생산량 유지’ 요구를 수용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노동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열망은 달랐다. 그래서 올해 현대·기아차 공투본은 노동강도 강화와 주간연속2교대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양보론자들은 3무 원칙이 ‘노조의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요구’라며 임금과 노동강도에서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워 보지도 않고, 먼저 양보를 하자는 것은 투쟁을 앞두고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는 우리 편의기를 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보론의 진정한 위험이다.

다행히 양보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후퇴했던 3무가 복원되고 급속노조의 핵심 작업장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사측의 지불 능력이 어느 때보다 높고, 심야노동 철폐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측은 기아차와 현대차를,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분리해 대응하려 할 것이다. 노조가 공동 투쟁과 원·하정 연대 투쟁을 결의한 만큼, 사측의 분리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특히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맞물려야 한다.

모승훈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꾸다

심선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여기, 우리가 있다!’로 시작된 청소 노동자 행진(이하, 행진)이 ‘밥과 장미의 행진’을 거쳐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올해는 6월 15일에 서울 도심에서 행진할 계획이다.

6월 15일은 미국 청소 노동자의 날로, 1990년 6월 청소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더는 이 사회의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일어난 청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생활임금과 휴게 공간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여 왔고, ‘나이트 여성 비정규 노동자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싸움에 나선 청소 노동자들

들’을 ‘되물’ 취급하는 나쁜 상식을 깨부셨다. 남들은 꿈 같은 것을 나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실천단을 꾸려 행진 참가를 조직하고,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새벽 4시에 도심 홍보전을 하고, 쌍용차 분향소와 재능 농성장 등에 연대했다. 5월 30일에는 ‘청소 노동자가 19대 국회에 명한다!’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복미서비스노조(SEIU) 서부서비스노동자지부가 국제 연대 메시지를 보내 오기도 했다.

“동료 청소 노동자 여러분, 올해 청소 노동자의 날, 우리는 더 넓은 99퍼센트

운동과 함께할 것이며, 1퍼센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세금 포탈과 노동자 착취를, 그리고 노동계급 공동체의 경제적 붕괴와 공공 영역의 오염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지금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한 달째 함께 파업을 하면서 전주대 총장실 점거 농성 등을 이어 오고 있다. 덕성여대와 동덕여대에서 공동집단 교섭을 시작했고, 홍익대와 동국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투쟁과 행진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다.

동국대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6월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6월 4일에 파업을 시작했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한 시간 꼬박 일해도 월급수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고 최소한 시급 5천6백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학 당국의 노조 탄압에 맞선 것이기도 하다. 동국대 당국은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 노조인데, 노동자를 빼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한 명 빼 가면 우리는 두 명을 조직하겠다’며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하면서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비 노동자 40명

가량은 6월 3일 창립 총회를 하고 민주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했다.

한편, 동국대 쓰레기 분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올해 기숙사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도 퇴사한 인원조차 충원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인원을 뽑았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종류로 쓰레기를 분리하던 것을 열두 종류로 분리하라고 하고 있다.

쓰레기

노동자들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 생각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 하며 울분을 토했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2010년 점거 농성을 통해 승리

를 쟁취한 바 있고, 지난해에도 단호하게 투쟁해 승리를 일궜다.

현재 노동자들은 “한두 달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투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일병 원 투쟁에서는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과도 싸워서 이겼다. 동국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뒤에는 서울일반노조가 있고, 그 뒤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동국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도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상황”과 2010년 본관 점거와 같은 단호한 투쟁, 학생들과 사회적 연대가 확대된다면 소중한 승리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재환

홍익대

홍익대 당국과 용역 업체 용진실업이 홍경화라는 복수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는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 호락호락 물러설 노동자들이 아니다.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은 49일간의 점거 투쟁으로 홍익대를 뒤흔들어 놓았던 저력을 가진 노동자들로, 노조 탄압에 맞서 학교 정문 앞에 한 달째 농성을 유지하며 투쟁하고 있다.

방학을 앞두고 학교 측은 농성장 철거를 강요하고 노조 간부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홍익대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경지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분회 동지들이 투쟁 기금을 모아오는 등 홍익대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가 단지 홍익대 분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노조 무력화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부지구협,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사노위, 전국학생행진 등이 참여하는 지원대책위가 구성됐다. 지난 5월 31일에는 50여 개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6월 5일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홍익대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해 연대를 표하고, 또 홍익대 노동자들이 함께 KTX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행동은 두 가지 투쟁 모두에 연대를 강화하는 효

과를 내 평소보다 연대 단체들의 참가가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홍익대 학생들의 지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들 대부분이 양 노조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3일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홍익대분회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산되는 연대 덕분에 홍익대 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청소 노동자 행진 때는 전체 참가자들이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홍익대로 행진해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소 노동자 투쟁의 상징인 홍익대 분회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이정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2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 이고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전국여성노조 등 관련 노동조합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로 단결했다. 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15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6월 2일에는 “호봉제 폐취! 교육감 직고용! 전 직종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교과부 앞 “연합” 집회도 했다.

노동자들의 표정은 활기찼고, 주장은 선명했다. “입사 한 달이나 10년이나 똑같은 월급은 말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도 교섭 상대가 교육감이라고 했다. 즉각 교섭에 나서 직접 고용 실시하라!”,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두세 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해라!”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며 차별을 당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학교 관행을 깨 부수자!”

한 노동자는 “교과부는 말로는 무기



6월 2일 교과부 앞 집회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달에 1백만 원도 못 받고 일해 온 이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계약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고나 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다” 하고 말했다. 대구에선 학교 사서 4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빠져 있다.

일부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에서는 상황이 좀 낫긴 하지만, 상당수 교육청들이 아직 공동 입단협을 묵살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 23일 전국 집중 서울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의 “차별을 철폐하라” 하는 주장이 서울에 울려 퍼질 것이다.

김승현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대학학자금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설립신고 쟁취,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투쟁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백 인 이상 민간기업의 77.1퍼센트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많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탓에 2009년 공무원 노동자 학자금 대출 총액은 6천9백억 원이나 된다.

2004년도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해

진된 동지 1백여 명을 복직시키고 진보 정당 후원을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전교조 소속 1천9백여 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번 총회를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 정책에 단호하게 항의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새누리당 소속 전 시장이 말아먹은 시 재정을 벌충한다며 시청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용인시도 경전철 공사가 유발한 재정파탄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겼다.

국가부채가 늘고 경제가 나빠지면 이러한 공격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가부채 7백74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3백42조 원이 공무원 등의 연금 총당 부채라면서 이 때문에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다. 이는 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적반하장이자 이간질일 뿐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곳곳에서 연금 삭감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맞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탄압에 위축됐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점차 회복되는 투쟁의 기운을 총회로 모으면서 자신감을 고무해야 한다.

전국 순회 중에 목격한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는 높다. 투쟁하자는 호소에 박수도 커지고 있다.

쌍용차 투쟁과 언론 노동자 투쟁, 최저임금 인상 투쟁, 민주노총 파업 등에 함께하면서 이번 총회를 유례없는 규모로 성사시켜 승리를 쟁취하고 압도한 정권에 카운터펀치도 날리자!

양윤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KT

불법·부실 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6월 1일 KT 창사기념일에 맞춰 이석채 회장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 활동가 들은 이석채와 경영진의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폭로했다.

노동부는 사측이 노동자 6천5백9명에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33억 1천만 원을 떼먹은 것을 밝혀냈다. 근로기준법 등 온갖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석채 회장은 구속·처벌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부실한 조사라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노동부는 사측이 자행한 직원 퇴출 프로그램과 노동자 사망 문제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퇴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올해만 일주일에 1명 꼴로 벌써 노동자 2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석채는 MBC 김재철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내리쬘은 대표적 낙하산이다. 친MB 인사들로 구성된 KT 경영진은 노동자를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악명 높은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알짜배기

노동자 수백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동안, 이들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해 투기자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고액 배당을 안기고 그 대가로 고액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 왔다. 급기야 청와대 불법사찰 은폐 시도에 이석채의 오른팔인 KT 사장 서유열이 연루됐다는 것도 폭로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당장 항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의 통제와 감시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데다가, KT노조마저 사측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오히려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거짓말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해관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부당 전보조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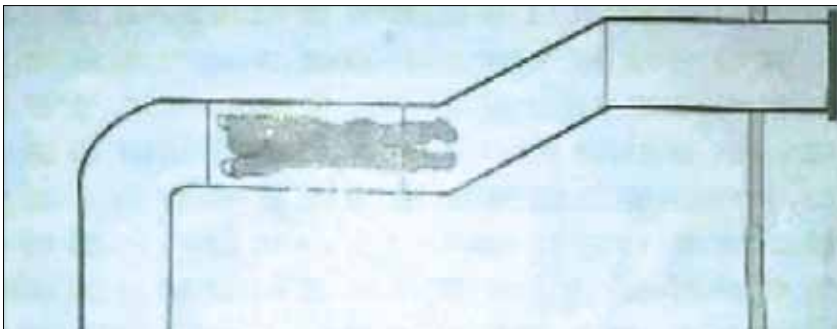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도 KT의 민주와 활동가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KT 노동자들은 KT를 불법 천지로 만들고 죽음의 작업장으로 내몬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 맞서 저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이원준 KT 민주동지회 회원

현대중공업

죽음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현대중공업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에 실린 당시 사고 가상도 이 노동자는 그림처럼 파이프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5월 30일 용접 상태를 살펴 보려 파이프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의식불명이 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노동자가 들어갔던 파이프(지름 45센티미터)는 일반 성인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아서 내부 작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비파괴검사 불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금지’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했고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다.

용접을 마친 파이프 내부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용접 때 나는 유독가스가 남아 질식 등의 위험들이 도사린 곳이다. 따라서 산소측정기의 착용과 감시인 대동이 필수적인데 이 노동자는 산소측정기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공사 기일을 맞추려고 안전을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이 또 한 명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생산제일주의”가 낳은 참극이다. 뻔뻔하게도 현대중공업 사측

은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조선사들의 돈벌이에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희생됐다.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산재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2배나 높다.

엄격한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죽음의 행렬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해 노동자 1천여 명이 사망해도 사업주가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명 미만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가 한 명 사망하면 사업주들은 고작 벌금 50만 원을 내면 된다. 노동자의 목숨이 50만 원이라니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민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기업 살인법”을 제정한 영국은 회사 매출액의 5~10퍼센트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끔찍한 희생을 대가로 하는 추악한 이윤몰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하청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인천대

5천4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하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인천대는 2009년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건물을 증축하고 학생 수도 4천 명이 늘었지만, 청소 인력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 때문에 인천대 주요 건물 열 한 곳을 고작 노동자 30명이 청소하고 있고, 심지어 인천대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일흔이 넘는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실어나르고 있다.

이런 엄청난 노동강도 때문에 최근에만 세 명의 노동자가 병가를 내야 했고, 한 명은 과로로 쓰러지면서 손의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과 용역 업체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껏 인천대 당국은 청소 용역 업체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비인간적 노동조건을 감내하게끔 강요해 왔다.

이간질

잡다 못한 노동자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학교 당국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학내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대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한 주 동안 무려 5천4백여 명의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처음에는 인천대 총학생회가 서명 캠페인에 함께 이름을 걸고, 인천대 다함께 회원들이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캠페인

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몇 진보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전히 학교 당국은 ‘예산 부족’을 핑계 삼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아비하게도 학생들의 등록금이 낮아서 청소 노동자들의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고 임금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대 ‘예산 부족’을 야기한 진정한 주범은 인천대 ‘국립 법인화’를 추진하고 교육 재정 지원을 회피하는 정부와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이다. 당장 ‘국립 법인화’ MOU 체결에 따라 2013년 인천대 예산은 올해보다 1백30억 원 삭감된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예산 삭감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에 항의해 인천대 학생들은 정부와 인천시에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교과부 앞 시위와 학내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만약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에 맞서 인력 충원 요구를 성취한다면, 이는 인천대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학생들의 광범한 지지·연대 속에 승리를 거둬 왔다. 인천대 다함께 회원들도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한술 대학생다함께 인천대 모임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2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법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기관들의 이윤 추구를 그나마 일부 통제하던 법적·행정적 규제들을 완화시킬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은 이런

버팀목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국내의 대형 자본들이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역대 정부들은 하나같이 이런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뜯어고쳐 왔다. 국내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게 하고, 국내 병원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헌법 소원이나 한미FTA 조항들을 이용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도록 다른 규제들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정부와 삼성 등 국내외 자본의 계획일 것이다.

그러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민간보험료도 대폭 오를 것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다. 따라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이번 집회를 개최한 무상의료국민연대나 의료민영화저지법국본처럼 진보진영의 많은 단체들도 광범하게 단결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원천—조직된 노동자들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이전의 패배 경험에서 비롯한 사기 저하나 조직 분열, 조직률 하락, 경제 위기 등이 이런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더 근본에서는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사측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더 중시하는 태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계획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독자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민주당에 의존하는 경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초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좌파와 급진적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는 데 힘을 쏟

아야 한다.

그러려면 단지 미온적인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선전만 하면서 상층의 공동전선 활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층의 노동자들 속에서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공개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쉽게도 지난 몇 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 운동에서 이런 접근과 관점이 많이 부족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나선 지금 진지한 투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내 이 방향으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호중

독자토론광장

6월 20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지난달 21일 총선 비례후보 경선 부정을 빌미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해 당일 명부를 탈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폭거였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서 나온 수사계획을 보면 정말 엽박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당시 목표인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의 불법 정당 가입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무더기 기소를 통해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당 명부를 쥐고서 얼마든지 과대 포장과 조작을 하며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고,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 들을 기소해 진보진영을 공격하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분노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이전에 동료 교사들과 대화를 할 때면, 선거 부정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교사와 공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모두의 문제다.

원 노동자 들이 느꼈을 분노와 우려는 매우 컸을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보정당 후원으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이러한 염려는 일제교사 반대 투쟁을 앞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은 단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운동 전체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모두의 문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교사와 공무원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진보진영 전체가 단결해 싸워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대의원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수원역 〈레프트21〉 가판

〈레프트21〉가판은 혁명적 신문과 간행물을 판매하고, 급진화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좌파적 주장을 펼치며 혁명적 신문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치 시위 효과를 낸다. 그래서 좌우가 대립하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우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레프트21〉 지난 호(82호)의 헤드라인은 “‘종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였다. 5월 29일 퇴근 시간에 나는 사회주의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수원역 앞 거리 신문 판매에 나섰다.

그런데 한 우파 행인이 대놓고 우리를 공격했다. 그는 우리에게 “빨갱이들은 북한에나 가라”며 가판을 방해했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명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막았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파들은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를 계기로 좌파들과 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틈타 우파들이 자신감을 갖고 좌파들을 공격한 것이었다.

우리는 세 명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이 명박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미 FTA에 반대하고, 정리해고에 신음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연대하는 진보적 활동이 ‘종북’입니까. 저희는 북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 때문에 탄압받아서

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젊은 사람들 30여 명이 몰려와 우리 주장을 경청했다. 그러자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 심지어 연설하는 나를 폭행하려 했다. 노골적인 방해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는 가판대에 다가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레프트21〉을 구입했다. 소책자 <<21세기 사회주의>>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파적 선동이 먹히지 않자, 동조자를 찾지 못한 우파는 결국 자리를 떴다. 통쾌했다. 지배자들의 공격과 우파들의 선동에도 거리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단호한 대응이다.

강철구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던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치 없이 ‘무상보육’ 시대에 들어서면서 돈벌이에 대한 더한층의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초기 기선제압!’,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라!’, ‘내 건물, 내 영역이므로 퇴거 요구가 가능하며, 불응 시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행정 당국의 단속에 대처를 준비하는 서울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교육 자료와 교육 시간에 나온 말들이다. 얼마 전 어린이집 감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들의 부정 수급이 대거 적발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출동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반감이 이런 자리를 만든 듯하다.

“단속 공무원이 녹음을 하면 녹음기 확 빼앗아 바닥에 쳐버려라”, “단속 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면 놀란다’거나 ‘보육 선생님이 성추행 당할까 봐 안 된다’고 말하라”는 등 매우 구체적 인 요령까지도 전달됐다.

얼마 전 서울·인천·경기 지역 어린

이집 1백81곳이 정부 보조금 거짓 수령과 특별활동 업체 리베이트 등으로 모두 16억 8천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폭로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94곳은 서울시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서울형 어린이집’이었다. 올 초 서울 시도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1백35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민련은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아이와 부모 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을 일삼는 이들의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와 이들의 몰염치한 행동은 예견된 일이었다. 여기에는 보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돈벌이 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부모와 보육 노동자가 함께 보육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을 건설해 제대로 된 무상 보육과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같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보육의 사회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심선혜 공공요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KTX 민영화 — 왜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연사: 박창식(전국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활동가, 해고 노동자, 박설<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해방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8860-4128

경기남부 공개 토론회
유로존 위기, 흔들리는 중국 경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
연사: 김어진(이주대학교 경제학 강사)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앞 매표소주민센터 옆 골든프리즈 5층)
참가비: 2천 원 (학생 1천 원)
문의: 010-8700-4647



5월 19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23번째 죽음을 막으려는 지지·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운동의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작업장 등에서 연대 행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쌍용차 투쟁

6월 16일 범국민대회로 집결하자!

쌍용차 투쟁에 대한 지지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역겹게도 2009년 파업 때 쌍용차노조를 '자살 특공대'라 비난했던 경기도지사 김문수도 분향소를 찾았다. 이런 자의 위선도 더 커진 정치적 압력을 보여 준다.

이런 분위기는 연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6월 13일 금속노조의 상경 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여러 연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지영, 홍세화, 김미화 등 저명 인사들의 거리 강연도 매주 두 차례 열린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각계 선언에 이어, 1백만 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이런 관심과 지지는 6월 16일 '범국민 행동의 날'에 대규모 결집으로 이어져야

한다. 올게도 쌍용차 범대위(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희망의 버스' 사법 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이날 집회를 공동 조직해 운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경동 시인 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 '희망버스' 지역 네트워크를 다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도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확대는 민주당이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압력으로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무급휴직자와 해고자의 분리 대응"이라는 양보안을 만지작거리던 민주당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차라리 손 떼라'는 비판에 맞

닥뜨리기도 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쌍용차 범대위의 '5대 요구안'이 공조의 출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쌍용차 사측이 2009년 합의조차 내팽개치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5대 요구안

운동의 확대는 무더기 소환장 발부 등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확대되는 연대 투쟁을 위축시키려 한다. 범대위는 소환장자들의 집단적 대응과 방어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 연대 투쟁 확대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의 구실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들은 그동안 연대 집회와 재정 모금 등에 큰 공헌을 해 왔다.

이런 행동은 계속돼야 한다. 금속노조

파업의 주요 요구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포함시키고, 현대·기아차 노조 등이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즉 연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정리하고 철폐'가 금속노조·민주노총 파업의 핵심 요구이기도 한 만큼, 노조 지도부는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 하루 연대 파업이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

특히 좌파 활동가들이 연대 투쟁 조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확대하려면 지역과 대학 등 기층에서 조직·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최근 학생 단체들이 집회와 서명전 등 공동 활동을 시작한 것은 좋은 예다. 이 과정에서 전국학생행진, 대학생다함께 등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주효했다. 지역이나 작업장에서도 이를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도 7월부터 지역 순회를 통해 지역으로 운동을 확대하려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과 언론 파업, 민주노총 투쟁 등 이명박 정부라는 공동의 적에 맞선 공동 행동도 모색하고 있다.

당장 6월 16일 더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자. 이를 디딤돌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유병규

6월 16일(토)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1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여의도공원 | 오후 1시
2부 연대 집회와 문화제
대한문 분향소 | 오후 7시
주최: 쌍용차 범대위 등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커지는 연대에 희망을 갖습니다”

4월 5일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23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번 투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쌍용차 범대위와 시민들이 저희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이런 연대에 희망을 갖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기권도 쌍용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최근 이석형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민주당이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이 흐트러지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싸움을 올곧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에 오르면서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쌍용차 범국민 행동주간'과 16일 '범국민 행동의 날'에도 이런 연대의 힘이 모

여야 합니다. 이 자리가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쌍용차 범국민 행동주간'과 '범국민 행동의 날'에 적극 참가해 연대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인터뷰·정리 유병규



정리 유병규

계간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이론과 실천의 통일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